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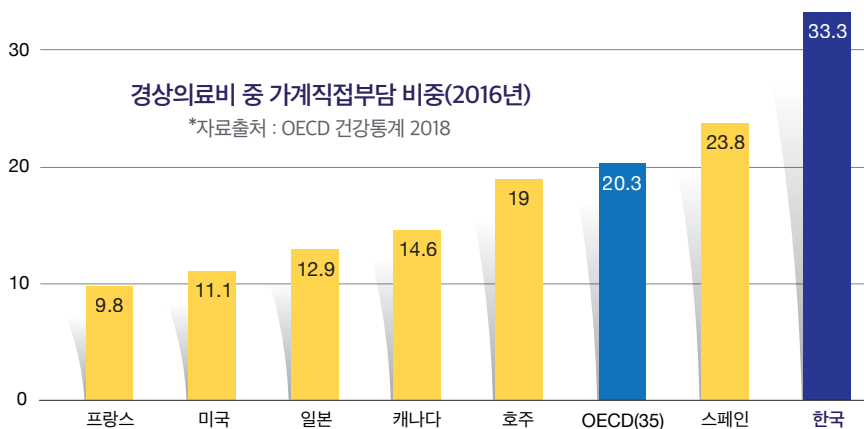
## 이슈브리프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향후 과제

이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의 핵심 모토 중 하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6년 기준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 보다 1.3%p 감소했지만, OECD 회원국(20.3%)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sup>1)</sup>이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자인 사회보험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의료 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3%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가족, 교육, 고용, 주거 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 이슈브리프 | 01-04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향후과제

| 위원회 활동 | 05-07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 위원회 동정 | 08  
 해운산업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OECD 건강통계 201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7%에 달했다.<sup>2)</sup> 이처럼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 '18.11.28.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했다.<sup>3)</sup> 이후 8차례의 회의를 거쳐 '19.4.4.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이하 검토안)'을 마련·공개하고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의 배경과 의미

기획단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의 건강보험 제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출발했다. 당장 현 정부에서 수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계획조차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그 이후의 건강보험 제도의 방향성과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 어쩌면 시기상조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현재 건강보험료율(6.46%) 2025년을 전후로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보장성 강화 방식이나 의료 전달체계 하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 의식이 있었다.

기획단은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1)건강보험의 적정보장, 적정



부담, 적정지출의 세 가지 중요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고, 2)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며, 3)건강보험의 운영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며 4)건강보험이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공공 의료 강화에 따른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주제로 삼아 4개의 영역별로 세부 문항을 정리하여 아래의 검토안을 작성했다.

###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과제

기획단은 의제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서 다소 논의의 제약과 한계가 있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쟁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이제부터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본격적으로 미래 의료보장

##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 1-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여 영역, 서비스항목, 본인부담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1-2.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 경제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부담 수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2)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 중 보건의료제도인식에 대한 설문내용으로 응답률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중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획단은 기존 운영중이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건강보험 TF/T의 논의를 이어 받아 설치됐고, TF/T는 '18.9.13.과 '18.10.11. 총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관련 8가지 쟁점을 정리한 바 있음.

- 1-3. 인구고령화, 보장성확대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부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지불제도 개선을 시작한다.
- 1-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장률 개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재정지출 등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1-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담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 2-1. 국민의료비 경감 및 의료보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2-2.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 2-3.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 조정 (또는 보장범위의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2-4.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편의 증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비교사이트 강화, 기존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 3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 3-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3-2.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결정 관련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 3-3.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을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임 방법을 개선한다.
- 3-4.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공익위원 중 1인이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3-5.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관·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

##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 4-1.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의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정책 가산 적용 및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기제 마련 등을 검토한다.
- 4-2.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시스템의 설계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빠진 논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과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논의 틀에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건강보험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과제와 한계도 있었다. 검토안은 기획단 내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견을 반영하여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검토안이 기획단 위원들의 완전한 의견 일치를 통해 만들어지지 못했다. 일부 문안은 참여 주체별 이견이 남아있는 내용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공사 의료보험 관계설정에 관한 개선방안의 경우, 민간영역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제기됐다.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국 운영, 공익위원 상근 및 공동위원장 체제가 쟁점으로 남았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기획단의 구성이 노사정 및 소수의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 공급자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 등 운영 및 구성의 한계도 있었다.



###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필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사노위는 관련 의제별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인 4월이 돌아왔다. 건강보험료가 내 월급의 폭탄이 아닌 내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리스크로부터 방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위원 명단

단장(1)	김 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노동계(2)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경영계(2)	이승용	한국경총 고용정책본부 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부(1)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공익(3)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 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간사(1)	이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http://www.eslc.go.kr/bbs/data/list.do?per\\_menu\\_idx=2244&menu\\_idx=2261&tabCnt=0&stype=](http://www.eslc.go.kr/bbs/data/list.do?per_menu_idx=2244&menu_idx=2261&tabCnt=0&stype=)



위원회 활동

#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법전문 교수; 이하 '위원회')는 '18.7.20. 발족하여 '19.4.12. 현재까지 전체회의(25회), 간사단회의(6회), 공익위원회의(11회)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18.7.20.)를 시작으로 제12차 전체회의('18.11.17.)까지 1단계 논의를 진행하였다. 핵심의제는 ILO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1단계 논의는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참여하여 ILO기본협약 비준 필요성과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범위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였다. 비록 전체회의를 통한 노사정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ILO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8인 전체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18.11.20.)」) 또한 '18.12.28.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전체 합의안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축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개선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의제들은 노사관계의 현실과 법제도 전반에 걸쳐있는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그리고 모든 의제들이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것들이었다. 전체회의뿐 아니라 노사정 당사자만 참여하는 집중교섭 방식까지 보충했지만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논쟁이 격화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의자료가 비공식적으로 유포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위원회는 근거 없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18.11.23.)부터 제25차 전체회의('19.4.12.)까지를 2단계 논의로 진행하였다. ILO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 보장 논의는 1차 공익위원 합의안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시스템을 중시하는 ILO의 이념을 반영하여 노사정이 동의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2단계 논의는 노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균형적 노사관계 구

일각에서 ILO기본협약 비준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인데,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가 왜 다루는가 하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용형태, 노사관계, 기업 내부구조, 노동조합 조직 등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모든 노동의제를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게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정부와 국회라는 제도가 너무 멀리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 혹은 절차로서 하나의 실험이다.

위원회는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있었고, 노동계 안팎으로부터 격려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내려놓지 않고 대화

위원회 활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쟁점별 공익위원 입장

	쟁점	노동계 주장	경영계 주장	공익위원 입장
공익위원 합의안 (18.11.20)	노조 가입 자격	해직자·실직자도 가입	현행 유지(해직자·실직자 가입 금지)	임원·대의원은 재직자에 한정
	공무원 노조 가입	모든 직급 가입	현행 유지(6급 이하만 가입)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설립신고제도	폐지	현행 유지	노조법시행령의 노조아님 통보 조항 삭제
공익위원 입장 (19.4.15)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2년) 유지	연장 필요	3년으로 연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현행 유지	개별교섭방식을 개선
	파업 시 직장 점거	현행 유지(점거 가능)	점거 금지	사업장내 쟁의행위 제한
	파업 시 대체근로	현행 유지(대체 금지)	허용 필요	큰 틀에서 현행유지하되, 소수의견 있음

와 토론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ILO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19.3.18.))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과 양보를 하였지만 전체회의의 의결로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그간에 축적된 논의 성과에 기반하여 ILO기본협약 비준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공익위원안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19.4.15.))

**발족취지** ▶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주체인 노·사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마련 및 대등하고 자치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의 마련을 위해 '18.7.20. 발족

담당 김미영 전문위원 (02-721-7143)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 1 논의 경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특위)는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10.12.)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의결한 후, 제1차~제3차 준비위원회를 거쳐, '18.10.30. 발족하였다.

'연금개혁특위'는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제1차 워크숍(18.11.6.)을 통해 위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발제를 듣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제2차 전체회의(18.11.9.)에서 제5차 전체회의(18.11.30.)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참여 위원들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논의를 진행했다. 제6차 전체회의(18.12.14.)에서는 국민연금 정부(안)인 '제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정부(안) 발표와 함께 '연금개혁특위'는 보다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9차 전체회의(19.1.25.)에서 제14차 전체회의(19.4.5.)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기초연금 수준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 지급보장 명문화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기초연금 수준 등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원회 활동

첫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2019년부터 0.5%씩 상향하여 2028년부터 50%를 확보해야 하며, 보험료율은 2020년부터 1% 인상하고, 10년간 0.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1안과, 2020년부터 20년간 0.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2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그 지급수준이 국민부담 여력을 초과하여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현행유지를 제안했다.



청년유니온은 현 국민연금 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 진단 하에, 현 세대부터 부담을 같이 나누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설정 및 보험료율 부담의 현실적 고려를 함께 판단하여, 소득대체율 45% 및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5%이내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모든 국민의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 노인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위해 45%~50%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적정급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료율은 10년간 2~3% 수준의 인상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안으로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12%, 2안으로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8%(0.5%씩 인상), 3안으로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8%(1%씩 인상)을 각각 제안했다. 단,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현행 9%로 동결하고 사업장·비사업장 가입자 기여금·부담금에 대한 균형성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50%이상 상향하고 이를 위한 보험료율을 1년에 0.2%씩, 15년간 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소득대체율 45%~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16%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대체율 45%~50% 상향을 제안하고,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시 12%, 소득대체율 50% 시 13.5%를 제시했다.

둘째, 기초연금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노동계는 A값의 15% 수준까지 인상, 경영계는 현행 유지, 청년위원회는 30만원 조기 인상 및 40만원까지 인상,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시 40만원·소득대체율 45% 및 50% 시 30만원, 대한은퇴자협회는 30만원 조기 인상,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0만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현시점에서의 추가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추가 쟁점 사항들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으로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3 향후 계획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18.10.30.~'19.4.29.(6개월)로, 4월 이내 최종 정리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발족취지**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전사회적 과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자 18.10.30. 발족

담당 송해순 전문위원 (02-721-7145)



## 위원회 동정 단신

## 해운산업위원회

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19.3.1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신규 선박건조와 선원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8차 전체회의('19.4.22.월)부터는 화물 확보와 선원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족취지** ▾ 해운산업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에 따른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 방안 수립을 위해 '18.11.23. 발족

담당 손영우 전문위원 (02-721-7144)



## 금융산업위원회

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19.3.6.수)에서 노동계에서 준비한 '은행권 과당경쟁 실태 및 개선 방안'과 '농협 사업구조 개편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8차 전체회의('19.3.19.화)에서는 경영계가 준비한 '은행산업 산별교섭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과 정부(금융위원회)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발족취지** ▾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18.11.19. 발족

담당 이덕재 전문위원 (02-721-7150)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회는 제15차 전체회의('19.3.5.화)에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도출한 이후, 제16차 전체회의('19.3.15.금)와 제17차 전체회의('19.3.29.금)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 검토문(안) 및 빈곤대책 관련 합의문(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족취지**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 등에 따라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을 위해 '18.7.12. 발족

담당 송해순 전문위원 (02-721-7145)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회는 제16차 전체회의('19.3.22.금)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17차 전체회의('19.3.29.금)에서는 대리운전(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과 웹툰·웹소설·일러스트(김희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플랫폼 노동의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족취지** ▾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및 위험 요인을 진단, 일자리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의 역할 제고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8.7.20. 발족

담당 강금봉 전문위원 (02-721-714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19.3.12.화)에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에 대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Mr. David Michaels 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제15차 전체회의('19.3.28.목)에서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과 서비스업 안전보건대책에 대한 세부논의주제(안)을 검토하였다.

**발족취지** ▾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8.7.17. 발족

담당 설문수 전문위원 (02-721-7151)

